

“경제민주화 통한 포용적 성장 시대 과제…재벌개혁 하겠다”

더민주 김종인 교섭단체 대표 연설

민생·경제 살리기 위한 개헌 필요 ‘특위 설치’ 제안 대기업 전횡 차단 상법 개정·남북 국회회담 추진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개헌을 위한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 ‘포용적 성장’을 시대적 과제로 제시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우리에게 맞는 지 짚어볼 시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

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김 대표는 “거대경제 세력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재벌을 ‘거대경제세력’으로 지정, 개혁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어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국가라는 보이는 손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재벌 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한 이사회 의사결정구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소액주주나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 총수의 특권을

제어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불공정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도 폐지해 대기업 횡포에 대한 견제장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언급하며 포용적 성장이라는 화두를 제시했다. 기본소득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제도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 포용적 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부채 주도의 성장’을 중단하고 모든 경제주체의 ‘기회 균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개혁과 관련, 그는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돌리고, 세출에서의 재원확보를 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세계개편 논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기초연금 30만원까지 단계적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주장한 뒤 “대통령이 공약한 누리과정 하나도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면 저출산 극복은 불가능하다”면서 “추경정책, 교육정책, 통신티 정책 등도 재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더민주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문제와 관련, 김 대표는 “정부가 대화에 막혀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남북관계의 원활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회의장이 나서서 ‘남북 국

회회담’을 추진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끝으로 “유능한 경제와 ‘튼튼한 안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나아가는 두 개의 깃발이다”며 “국민

의 삶을 책임지는 경제정당, 국민이 믿고 안심하는 안보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野, 5·18 특별법 개정안 당론 발의…새누리 동참 주목

더민주 이계호, 오늘 대표 발의…국민의당·정의당도 추진 의사

아권의 5·18 특별법 개정안 당론 발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민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에 나서고 있으며 정의당도 조만간 당론 발의에 착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21일 더민주 이계호 의원(담양·장성·영광·함평)은 당내 의원 전원의 공동 발의를 통해 오는 23일 5·18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이 국민의당 당론 발의 법안과 다른 점은 ‘임을 위한 행

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하기 보다는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념곡 지정을 두고 보수 진영과 소모적 논쟁을 벌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기념식에서 제창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 날조, 비방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 물론 이 같은 내용의 전시, 상영, 게시, 제조, 공여 등의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이 의원이 지난 비

대위 회의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며 “오는 23일까지 당내 모든 의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당도 조만간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5·18 특별법 개정안 당론 발의에 대해 ‘적극적인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며 “정의당 김중대 의원이 개정안 발의에 나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야권이 5·18 특별법 개정안 당론 발의에 힘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새누

리당의 참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5·18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면 20대 국회 협치의 상징적인 첫 걸음을 떼는 것은 물론 국민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야에 5·18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발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대표가 22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5·18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당론 발의를 언급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 안중에 없는 새누리는 절망 상태”

이정현 의원 “권성동 물러나야”

탈당 의원의 복당 문제로 재현된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내분 사태가 ‘2라운드’로 접어들고 있다. 이번에는 권성동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이 당무에 복귀하면서 자신이 추천한 권 사무총장을 직권

해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권 사무총장은 비대위원장에 당직 추천권을 있으나 임명권은 없다는 당헌·당규를 들어 맞서는 형국이다.

김 위원장은 “우린 이미 그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렸다. 재론의 여지가 없다”며 “권이 권 사무총장에 대해 ‘경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도 명예로운 퇴진을 배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친박계 이정현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권 총장에 대해 “당이 이만큼 어려워졌으면 자기를 부각시키는 것보다 제발 당을 살리는 당 화합, 통합 쪽으로 각자 위치에서 각자가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국민들로부터 회초리를 맞았으면 양보도 하고 한발 물러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 내분 때문에 “새누리당 안에서 국민이 실종됐다.

자기는 있고 자기 편은 있고 자기 꿈은 있고 자기 정치는 있으면서 지금 국민이 사라졌다”며 “새누리당은 지금 상태로서는 거의 절망”이라고 평했다.

반면, 권 총장은 굳이 당헌·당규를 따지지 않더라도 자신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며 이날 정상적으로 당무를 봤다.

비박계 일각에서는 오히려 김희옥 혁신비대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김 위원장이 오히려 당 혁신에 상당히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사퇴를)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여 “결과 수용” vs 야 “갈등 커져”

정부의 21일 영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발표와 관련,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자칫 여권 분열로 치달 수 있는 논란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내심 안심하며 “결과가 존중되고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상용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신공항 건설 백지화와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정은 공신력이 확보된 기관의 전문가들에 의해 내려진 것”이라며 “선정 결과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 오해나 불신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제 신공항 문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도 상생으로 승화해 김해공항이 세계 명품공항으로 재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김세연(부산 금정구) 의원은 “장기적으로는 화물 및 장거리 국제노선 위해서는 24시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세차례 용역을 통해서 안전과 소음문제로 어렵다고 결론 내린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당은 신공항 관련해 갈등을 촉발시킨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평가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연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공항 결정까지 이렇게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면서 “신공항 용역 과정 및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추후 국회 차원에서 되짚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지역갈등 문제, 비용 문제, 지역갈등 측면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내린 중립적 결정이라고 본다”면서 “그러나 이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드러난 소모적 갈등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영춘·김해영·박재호·전재수·최인호 의원 등 더민주 소속 부산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안전성과 경제성,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는 점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 **축**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